



1946년 3월 창간 제 236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3일 (음력 8월 24일) 금요일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지 발굴 본격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안팎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안팎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법무부 담당자와 만나 광주교도소

안팎 발굴 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단 측은 광주교도소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을 위한 준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법무부에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 측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굴

5·18기념재단, 이르면 다음주께 현장 조사 계획

계엄사령부 문건 민간인 사망 기록…최근 증언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기)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다른 형태의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이르면 다음주께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이달 안에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은 재단과 5월 단체가 주관하고 현장 조사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이다. 5·18 이후 교도소 관사 뒤에서는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이른바 ‘교도

소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7명(보안대 자료 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최소 52명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단은 현재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를 통해 교도소 내부 암매장 장소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또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 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메모에서 암매장 관련 의도를 찾았다. 의도로 표시된 곳은 교도소 밖, 법무부 소유 땅이다. 교도소 안팎 모두 법무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발굴 조사가 가능하다.

재단은 광주교도소 외에 7공수여단이 주둔했던 제2수원지 상류쪽과 화순 너리재 인근 등도 올해 내 발굴 작업을 별도로 예정이다.

이용규 기자

한국노총전남본부, 전남 쌀 구매에 발 벗고 나섰다

운영위원회서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키로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전남 쌀 소비 촉진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본부는 12일 본부 회의실에서 134 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최근 풍년으

로 인한 쌀 과잉 생산과 급속한 소비 감소로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돋기 위해 전남 쌀 소비촉진에 참여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운영위원 45명은 자기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결의된 사항을 적극 알려 전남 쌀 산업을 지키고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한국노총 전남본부 5만 조합원이 각종 흥보 및 교육 등에서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전남본부가 이처럼 전남 쌀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은 지역 항토기업인 남해화학(주)노동조합과 여수지역지부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전남지역본부 산하 각급 조직의 구내식당 등 단체 단합행사 등에서도 각종 선물 및 포상품에도 전남 쌀을 적극 사용하고 각 지역 산업별 노동 조합에 널리 홍보하여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키로 결의했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는 2018년부터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를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계속된 풍작에 따른 쌀 과잉 과잉 기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3000평)당 340만 원을 지원해 벼와의 소득차를 어느 정도 보전하는 제도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쌀 생산조정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남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802ha를 추진했으나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전남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과잉 문제가 없도록 사료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아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품목을 위주로 확대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